

# 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현금 ₩400,000을 수취하였다.

구분	(주)세무의 건물	(주)한국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5,100,000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	600,000
공정가치	3,800,000	3,500,000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주)한국의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할 경우, (주)세무와 (주)한국이 동 유형자산의 교환시점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주)세무

(주)한국

- |                 |               |
|-----------------|---------------|
| ① 처분이익 ₩100,000 | 처분손익 ₩0       |
| ② 처분이익 ₩200,000 | 처분손익 ₩0       |
| ③ 처분이익 ₩200,000 | 처분이익 ₩100,000 |
| ④ 처분이익 ₩300,000 | 처분손실 ₩100,000 |
| ⑤ 처분이익 ₩300,000 | 처분이익 ₩100,000 |

2. (주)세무가 20×1년 12월 31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은 ₩50,000이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12월 31일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재고자산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다.)

- 거래처 A로부터 FOB 선적지인도기준으로 매입한 원가 ₩40,000의 상품이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거래처 B에게 FOB 도착지인도기준으로 원가 ₩20,000의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현재 운송 중에 있다.
-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수탁자 C에게 적송한 원가 ₩20,000의 상품 중 40%가 판매되었다.
- 고객에게 인도한 시송품의 원가는 ₩30,000이며, 이 중 20%에 대해 매입의사를 통보받았다.
- 거래처 D에게 원가 ₩10,000의 상품을 ₩12,000에 판매하고, 2개월 후 이를 ₩13,000에 재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 ① ₩128,000      ② ₩134,000      ③ ₩136,000      ④ ₩140,000      ⑤ ₩156,000

3.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 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산정 시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 매출총이익률	30%	○ 당기 매출채권 회수	₩33,000
○ 당기 현금매출	₩11,000	○ 기초 재고액	7,050
○ 기초 매출채권	1,000	○ 당기 매입액	30,000
○ 기말 매출채권	2,000		

- ① 5회      ② 5.5회      ③ 6회      ④ 6.5회      ⑤ 7회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이와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 ②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 ③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 ④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5.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영업용 유류 저장설비(취득원가 ₩3,900,000, 잔존가치 ₩300,000, 내용연수 4년)를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 종료 후 ₩400,000으로 추정되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이는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한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1년도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8%이며,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7350이고, 이후 할인율의 변동은 없다.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① ₩1,080,000      ② ₩1,185,840      ③ ₩1,275,840      ④ ₩1,581,120      ⑤ ₩1,701,120

6.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5월 1일 임대 및 시세차익을 위하여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 5월 1일 동 건물의 용도를 영업용 건물(잔존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로 전환하고 즉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20×1. 12. 31.	20×2. 5. 1.	20×2. 12. 31.
¥980,000	¥1,050,000	¥990,000

① 영향없음                      ② ₩7,500 감소                      ③ ₩7,500 증가  
④ ₩10,000 감소                      ⑤ ₩10,000 증가

7. 생물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 ②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은 생물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 ④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⑤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8. (주)세무는 차세대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활동에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발활동 관련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구분	20×1. 1. 1. ~ 20×1. 12. 31.	20×2. 1. 1. ~ 20×2. 4. 30.
개발활동	₩4,500,000	₩7,500,000

(주)세무는 동 무형자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며, 20×2년 5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매년 말 무형자산의 손상징후를 검사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주)세무의 동 무형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2년 말	20×3년 말	20×4년 말
회수가능액	₩11,500,000	₩8,200,000	₩8,900,000

(주)세무가 동 무형자산에 대해 인식할 (A)20×3년도 손상차손과 (B)20×4년도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무형자산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 |              |            |              |            |
|--------------|------------|--------------|------------|
| (A)          | (B)        | (A)          | (B)        |
| ① ₩1,400,000 | ₩1,184,000 | ② ₩1,400,000 | ₩1,584,000 |
| ③ ₩1,800,000 | ₩1,184,000 | ④ ₩1,800,000 | ₩1,584,000 |
| ⑤ ₩1,800,000 | ₩1,684,000 |              |            |
9.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 ③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 ④ 가득기간 이후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은 가득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회계처리한다.
- ⑤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10. 구조조정 관련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의 구축에 대한 투자원가는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 ②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 측정 시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과 상계한다.
- ③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한 지출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 ④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간접비용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 ⑤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11. 종업원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 ②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③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충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 ④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⑤ 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2.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참가적 우선주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20×1년과 20×2년에는 배당을 못하였으나, 20×3년에는 조건에 따라 배당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구분	주당 액면금액	발행 주식수	액면금액 기준 연 배당률	비고
우선주 A	₩1,000	100주	3% (누적적)	(주)세무가 20×4년 12월 31일 1주당 ₩1,000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우선주 B	₩1,000	100주	5% (비누적적)	(주)세무가 20×4년 12월 31일 1주당 ₩1,200에 의무적으로 상환

우선주 A와 B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20×2년도, 20×3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액은? (단, 우선주 발행시점의 적절한 할인율은 5%로 가정하고,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해당연도 배당금 지급시기는 해당연도 말이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5%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	0.9524	0.9524
2	0.9070	1.8594
3	0.8638	2.7232
4	0.8227	3.5460

- ① ₩12,970 감소                      ② ₩15,000 감소                      ③ ₩15,561 감소  
 ④ ₩17,596 감소                      ⑤ ₩18,000 감소

13.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3년 12월 31일
○ 액면이자율: 2%(매년 말 지급)
○ 발행일 현재 전환사채 시장이자율: 5%
○ 발행일 현재 동일한 조건의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6%
○ 보장수익률: 4%
○ 전환조건: 20×1년 2월 1일부터 20×3년 11월 30일까지 액면금액 ₩10,000 당 액면금액 ₩5,000의 보통주 1주로 전환 가능

(주)세무가 전환사채의 발행일에 인식할 자본요소(전환권대가)는?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5%	6%	4%	5%	6%
3	0.8890	0.8638	0.8396	2.7751	2.7232	2.6730

- ① ₩24,507                      ② ₩26,715                      ③ ₩27,807                      ④ ₩54,522                      ⑤ ₩62,432

14. (주)세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20×1년 4월 1일에 발행하였으며,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 액면금액: ₩2,000,000	○ 만기일: 20×3년 12월 31일
○ 권면상 발행일: 20×1년 1월 1일	○ 액면이자율: 3%(매년 말 지급)
○ 20×1년 1월 1일 기준 시장이자율: 5%	
○ 20×1년 4월 1일 기준 시장이자율: 4%	

(주)세무는 20×2년 10월 1일에 액면금액 중 50%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1,000,000에 조기상환하였다. 동 사채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하고,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5%	4%	5%
1	0.9615	0.9524	0.9615	0.9524
2	0.9246	0.9070	1.8861	1.8594
3	0.8890	0.8638	2.7751	2.7232

- ① ₩18,857 감소                      ② ₩49,823 감소                      ③ ₩58,103 감소  
 ④ ₩79,257 감소                      ⑤ ₩85,368 감소

15.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현금 ₩1,000,000을 대여(만기일: 20×3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5%, 매년 말 이자지급, 유효이자율 5%)하고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주)세무는 (주)대한과 동 대여금에 대해 재협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다.

○ 만기일: 20×5년 12월 31일로 연장
○ 표시이자율: 20×2년 초부터 5%에서 3%로 인하(매년 말 지급)
○ 20×1년 말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100,000은 (주)세무가 부담
○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 6%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대여금은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6%	5%	6%
1	0.9524	0.9434	0.9524	0.9434
2	0.9070	0.8900	1.8594	1.8334
3	0.8638	0.8396	2.7232	2.6730
4	0.8227	0.7921	3.5460	3.4651

- ① ₩20,920 감소                      ② ₩53,947 감소                      ③ ₩103,947 감소  
 ④ ₩120,920 감소                      ⑤ ₩153,947 감소

16. (주)세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액은? (단, 금융자산의 단가 계산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일자	내역
20×1년 12월 1일	A사가 발행한 A주식(주당 액면금액 ₩3,000) 100주를 주당 ₩4,000(공정가치)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취득수수료로 주당 ₩80을 별도로 지급함
20×1년 12월 31일	A주식의 기말 주당 공정가치는 ₩5,000, 예상 처분 관련 거래원가는 주당 ₩100임
20×2년 3월 15일	A사는 현금배당(주당 ₩150)과 주식배당(주당 0.2주)을 결의 및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세무는 현금 ₩15,000과 A주식 20주를 수령함. 당일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5,000임
20×2년 7월 1일	A주식의 50%를 주당 ₩6,000에 현금으로 처분하였으며, 처분 관련 거래원가로 주당 ₩120을 별도로 지급함
20×2년 10월 1일	A사는 무상증자(주당 0.1주)를 결의 및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세무가 현재 보유한 A주식의 수가 10% 증가함. 당일 A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6,000임
20×2년 12월 31일	A주식의 기말 주당 공정가치는 ₩7,000, 예상 처분 관련 거래원가는 주당 ₩140임

- ① ₩349,800 증가                      ② ₩421,800 증가                      ③ ₩438,000 증가  
 ④ ₩521,800 증가                      ⑤ ₩538,000 증가

17. (주)세무의 20×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1월 1일 (주)세무의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다. ○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20×1년도와 20×2년도의 당기순이익 평균이 ₩1,050,000을 초과하면, 매 초과액 ₩3,000당 보통주 1주를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신주인수권 1,000개를 부여하였으며, 동 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4,000이고 20×1년도 보통주식의 주당 시장가격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종가	12월 31일 종가	1월 1일 ~ 12월 31일 평균주가
₩4,000	₩6,000	₩5,000
20×1년 9월 1일에 신주인수권 600개가 행사되어 (주)세무는 보통주 600주를 발행하였다. ○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470,000이다.		

(주)세무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희석주당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 ① ₩134                      ② ₩140                      ③ ₩142                      ④ ₩144                      ⑤ ₩147



18. (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의 보통주 60%를 ₩120,000에 취득하고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주)세무의 20×1년 말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 취득일 현재 (주)대한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비고
재고자산(상품)	₩20,000	₩30,000	20×1년 중 모두 외부판매
기계장치	50,000	80,000	정액법 상각, 잔존가치 ₩0, 잔존내용연수 5년

○ 20×1년 중 (주)세무와 (주)대한의 재고자산(제품)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다.

판매회사 → 매입회사	판매회사		매입회사 장부상 기말재고
	매출액	매출원가	
(주)세무 → (주)대한	₩20,000	₩16,000	₩10,000

○ (주)세무와 (주)대한이 20×1년도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20,000이다.

○ (주)세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주)대한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 ① ₩76,800
② ₩77,600
③ ₩79,200
④ ₩81,600
⑤ ₩84,000

19. (주)세무는 차량운반구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에게 차량운반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판매는 실질적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리스계약단계에서 (주)세무는 ₩1,000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 차량운반구의 공정가치는 ₩1,300,000이며, 제조원가(장부금액)는 ₩1,000,000이다.
- 차량운반구의 20×3년 말 예상 잔존가치는 ₩50,000이며, 이 중 보증잔존가치는 ₩30,000이다.
- (주)대한은 차량운반구를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사용한다.
- (주)대한은 차량운반구 사용료 ₩500,000을 매년 말 지급한다.
- (주)대한은 사용기간 종료시점에 차량운반구를 (주)세무에게 반환한다.
- 20×1년 초 (주)세무의 내재이자율은 5%이고, 시장이자율은 10%이며, 내재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다.

차량운반구 판매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재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10%	5%	10%
1	0.9524	0.9091	0.9524	0.9091
2	0.9070	0.8265	1.8594	1.7355
3	0.8638	0.7513	2.7232	2.4869

- ① ₩393,091 증가
 ② ₩394,091 증가
 ③ ₩408,117 증가
- ④ ₩409,117 증가
 ⑤ ₩423,143 증가

20. (주)세무는 20×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를 납품하고 기계장치에 대해 유지보수 용역을 5년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주)세무는 기계장치와 유지보수용역을 보통 따로 판매하지는 않으며, 기계장치와 5년간의 유지보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객과 거래가격을 ₩1,800,000으로 합의하였다. 기계장치와 5년간 유지보수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계장치	5년간 유지보수용역
개별 판매가격	₩1,500,000	₩500,000

(주)세무는 20×1년 초 고객에게 기계장치의 통제를 이전하였으며, 20×1년 말까지 유지보수용역도 계약대로 이행하였다. 20×2년 초 (주)세무와 고객은 4년의 잔여 기간 동안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의 빈도와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4년간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을 ₩200,000으로 결정하였다. 축소된 유지보수용역은 4년간 매년 동일하게 제공된다. 계약변경일 이후에 제공할 유지보수용역은 기계장치의 납품과 구별되며, 계약변경 전에 제공한 유지보수용역과도 구별된다. (주)세무가 20×1년도와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 |              |              |              |              |              |              |
|--------------|--------------|--------------|--------------|--------------|--------------|
| <u>20×1년</u> | <u>20×2년</u> | <u>20×1년</u> | <u>20×2년</u> | <u>20×1년</u> | <u>20×2년</u> |
| ① ₩1,440,000 | ₩50,000      | ② ₩1,440,000 | ₩90,000      | ③ ₩1,590,000 | ₩50,000      |
| ④ ₩1,590,000 | ₩90,000      | ⑤ ₩1,590,000 | ₩100,000     |              |              |

2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②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③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 ⑤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22. 사업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3가지 요소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이다.
- ②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③ 취득자는 때로 대가를 이전하지 않고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결합 회계처리방법인 취득법을 적용한다.
- ④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므로,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할 수 없다.
- ⑤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2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때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원가로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 ③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나,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과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 ④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다면, 그 자산에 대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는 발생가능한 유입의 크기, 발생가능한 시기 및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이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이나 부채 및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경우에 적절하다.

**24.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되고,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 ②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지만,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은 떨어진다.
- ③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 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 포함한다.
- ④ 역사적 영업현금흐름의 특정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하면, 미래 영업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
- ⑤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보유목적이 다르므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25.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및 전환원가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직접재료 매입액은 ₩90,000이며, 매출액은 ₩300,000이다.

	재고자산	
	기초	기말
직접재료	₩20,000	₩30,000
재 공 품	25,000	34,000
제 품	44,000	20,000

	당기 지급액	기초		기말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직접노무원가	₩25,000	₩2,500	-	₩1,500	-
수도광열비	30,000	2,500	-	-	₩10,000
복리후생비	15,000	-	₩3,500	-	8,000

(주)세무의 20×1년 매출총이익은?

- ① ₩110,000      ② ₩120,000      ③ ₩156,000      ④ ₩180,000      ⑤ ₩190,000

26.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주)세무는 20×1년 초에 연간 제조간접원가를 ₩100,000으로, 직접노무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년 생산·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중 작업 #201, #202, #203을 착수하였다.				
○ 20×1년 중 작업별 실제발생한 원가 및 직접노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201	#202	#203	합계
직접재료원가	₩27,500	₩28,000	₩4,500	₩60,000
직접노무원가	₩50,000	₩54,000	₩26,000	₩130,000
직접노무시간	2,000시간	2,000시간	1,000시간	5,000시간
○ 20×1년 실제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총 ₩120,000이다.				
○ 20×1년 중 작업 #201과 #202는 완성되었으나, #203은 20×1년 말 현재 작업 중이다.				
○ 작업 #201은 20×1년 중에 판매되었으나, #202는 20×1년 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				

(주)세무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할경우, 20×1년 기말 제품재고금액은?

- ① ₩125,500      ② ₩129,500      ③ ₩130,000      ④ ₩132,000      ⑤ ₩134,000

27.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2.5kg
  - 직접재료 표준가격: ₩10/kg
  - 직접재료 실제 구입가격: ₩15/kg
  -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12,500(불리)
  - 직접재료 능률차이: ₩5,000(유리)

20×1년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이 500kg일 때, 실제 제품 생산량은? (단, 기말 재공품은 없다.)

- ① 400단위
  - ② 600단위
  - ③ 800단위
  - ④ 1,000단위
  - ⑤ 1,200단위

28.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직접재료의 10%가 제조과정에서 증발되는데, 이러한 증발은 정상적이며 제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당기 생산 및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물량 (전환원가 완성도)	구 분	직접재료원가	전환원가
기초재공품	4,750kg(50%)	기초재공품	₩11,200	₩18,000
당기 착수	45,000	당기발생원가	90,000	195,750
당기 완성	36,000			
기말재공품	9,400(60%)			

(주)세무의 기말재공품 원가는?

- ① ₩47,000
  - ② ₩57,800
  - ③ ₩83,000
  - ④ ₩93,800
  - ⑤ ₩108,200

29.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결합공정에서 기초재공품은 없고, 당기투입원가는 ₩60,500이며, 기말재공품원가는 ₩4,500이다.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이 필요하지 않지만, 제품 A와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 C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	판매량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제품 A	2,000단위	1,800단위	₩40,000	₩70
제품 B	2,500	2,100	25,000	30
부산물 C	200	200	-	15

(주)세무가 순실현가치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제품 A의 매출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① ₩6,880
  - ② ₩7,600
  - ③ ₩36,120
  - ④ ₩68,400
  - ⑤ ₩71,100

30.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기와 당기의 표준원가는 동일하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 표준원가>			
	표준수량	kg당 표준가격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직접재료 A	2.0kg	₩10	₩20
직접재료 B	1.2	20	24

  

<직접재료 구입 및 투입>			
	구입량	투입량	kg당 구입가격
직접재료 A	10,000kg	9,000kg	₩12
직접재료 B	5,000	3,000	18

당기에 직접재료 A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직접재료 B는 공정의 6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기초재공품은 1,000단위(공정의 완성도 40%)이었고 당기완성품은 3,500단위이며, 기말재공품은 1,500단위(공정의 완성도 50%)이었다. (주)세무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① ₩10,000 유리
 ② ₩10,000 불리
 ③ ₩14,000 유리
- ④ ₩14,000 불리
 ⑤ ₩24,000 불리

31. (주)세무는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조부문		보조부문	
	P1	P2	S1	S2
S1	40%	30%	-	30%
S2	40%	40%	20%	-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0,000과 ₩13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에 집계된 원가는?

- ① ₩50,000
 ② ₩100,000
 ③ ₩220,000
 ④ ₩250,000
 ⑤ ₩270,000

32. (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에 의하여 판매관리비를 고객별로 배부한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기 위해 20×1년 초에 수집한 연간 예산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연간 판매관리비 예산: ₩500,000(급여 ₩300,000, 기타 ₩200,000)			
○ 자원소비단위(활동)별 판매관리비 배분비율			
	고객주문처리	고객관계관리	계
급여	60%	40%	100%
기타	70%	30%	100%
○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활동	원가동인	활동량	
고객주문처리	고객주문횟수	80회	
고객관계관리	고객수	30명	

20×1년 중 주요 고객 A가 12회 주문할 경우, 이 고객에게 배부될 판매관리비는?  
 ① ₩6,000                    ② ₩8,000                    ③ ₩14,000                    ④ ₩48,000                    ⑤ ₩54,000

33. (주)세무는 두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각 공정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A공정	B공정
최대생산능력	7,000단위	9,000단위
총 고정원가	₩188,000	₩160,000
단위당 변동원가	₩12	₩20

A공정 완성품(양품)은 바로 판매할 수 없고, B공정에서 추가가공하여 완제품 생산 후에 단위당 ₩100에 전량 판매할 수 있다. A공정에서는 투입량의 10%가 A공정 종점에서 공손이 되지만, B공정에서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공손은 정상 공손이고 정상공손원가는 양품에 배분하며, 공손품은 처분가치도 폐기비용도 없다. B공정 완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① 5,220단위                    ② 5,400단위                    ③ 5,800단위                    ④ 6,000단위                    ⑤ 6,120단위



34. (주)세무는 당기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당기 생산량은 5,000단위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이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150
총 고정판매관리비	324,0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5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50

(주)세무의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 ① 4,160단위      ② 4,460단위      ③ 4,600단위      ④ 4,640단위      ⑤ 4,680단위
35.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220이며, 총 고정원가는 ₩1,080,000이다. 당기 예상 매출액은 ₩1,000,000부터 ₩3,000,000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룬다. 3,000단위 이하 판매될 확률(a)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b)의 합(a+b)은?
- ① 40%              ② 50%              ③ 60%              ④ 70%              ⑤ 80%
36. (주)세무는 공정이 정상인지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공정 조사비용은 ₩10,000이고, 조사 후 공정이 비정상 상태이면 교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공정이 비정상인데 조사하지 않으면 손실 ₩70,000이 발생한다. 공정을 조사하는 경우의 기대비용은 ₩19,000이고 공정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의 기대비용은 ₩21,000이다. 공정 전문가 L씨에게 상담을 받으면 공정 상태에 대한 완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공정 상태에 대한 완전정보의 대가로 L씨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 ① ₩2,000              ② ₩3,000              ③ ₩7,000              ④ ₩8,000              ⑤ ₩9,000
37.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A, B)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공급하는 연간 예상 용역량은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제조부문		
	S1	S2	A	B	
S1	-	200kW	500kW	300kW	1,000kW
S2	300시간	-	450시간	250시간	1,000시간

S1이 제공하는 전력의 kW당 변동원가는 ₩100이고, S2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간당 변동원가는 ₩80이다.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전력을 kW당 ₩120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주)세무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S1을 폐지하고 필요한 전력을 전량 (주)한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이익 증가액은?

- ① ₩4,000              ② ₩11,200              ③ ₩12,800              ④ ₩13,600              ⑤ ₩14,400

38. (주)세무는 특수기계를 이용하여 A, B, C 세 가지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이 특수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은 10,0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제품 A	제품 B	제품 C
단위당 판매가격	₩400	₩500	₩700
단위당 변동원가	₩160	₩200	₩380
단위당 특수기계 이용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제품별 정규 시장수요	3,000단위	1,000단위	500단위

(주)세무가 최대 달성가능한 이익을 기준으로 생산·판매 계획을 수립한 직후에 그 동안 거래가 전혀 없던 (주)한국으로부터 제품 A를 단위당 ₩360에 800단위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주)세무의 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① ₩50,000
 ② ₩42,000
 ③ ₩38,000
 ④ ₩25,000
 ⑤ ₩20,000

39.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 단위당 변동원가는 ₩150으로 일정하나, 고정원가는 제품 생산량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계단형으로 증가한다. 제품 생산량이 첫 번째 구간(1 ~ 1,000단위)일 때 손익분기점은 840단위이고, 두 번째 구간(1,001 ~ 2,500단위)일 때 손익분기점은 2,400단위이다.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갈 때 증가하는 고정원가(a)와 달성가능한 최대이익(b)은? (단,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만 고려할 것)

(a)      (b)                      (a)      (b)                      (a)      (b)

- ① ₩78,000, ₩5,000                      ② ₩78,000, ₩8,000                      ③ ₩82,000, ₩5,000  
 ④ ₩82,000, ₩8,000                      ⑤ ₩92,000, ₩5,000

40. (주)세무는 이익중심점인 A, B 두 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A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여 외부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B사업부에 내부대체할 수도 있다. A사업부의 부품 최대생산능력은 4,000단위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이며, 외부시장에 단위당 ₩1,000에 3,000단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사업부는 B사업부로부터 1,600단위를 내부대체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만, 내부대체 수량에 대해서는 A사업부의 변동원가가 단위당 ₩50 감소한다. A사업부가 1,600단위를 전량 대체하는 경우,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 ① ₩600                      ② ₩650                      ③ ₩700                      ④ ₩750                      ⑤ ₩800

## 행정소송법

41. 행정소송의 구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항고소송: 행정청의 (    )이나 (    )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국가 또는 (    )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①    : 처분,    : 행정심판의 재결,    : 공공단체
- ②    : 처분,    : 부작위,    : 공공단체
- ③    : 처분등,    : 부작위,    : 공공단체
- ④    : 처분등,    : 부작위,    : 지방자치단체
- ⑤    : 처분등,    : 행정심판의 재결,    : 지방자치단체

42.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②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③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 ④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외에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 ⑤ 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43.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④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⑤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44.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③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취소소송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45.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 ① 피고경정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③ 직권심리  
④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⑤ 행정청의 소송참가

46.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③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재송취소되었다면,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더라도 인근 주민은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법률상 이익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47.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②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③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④ 한의사가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법」상 건축협약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48.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고경정 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③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피고경정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④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 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49.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②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③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0. 공부(公簿)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 ②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 ③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 ④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 ⑤ 지적공부상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행위

51.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방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②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 ③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④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5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관할   나. 직권심리  
ㄴ. 행정심판기록의 제출 명령                         르. 집행정지

- ①  $\neg$                       ②  $\neg, \perp$                       ③  $\perp, \Rightarrow$   
④  $\neg, \perp, \Rightarrow$             ⑤  $\neg, \perp, \Rightarrow, \Leftarrow$

53. 집행행정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②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하나, 그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④ 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54.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
- ②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다.
- ③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④ 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 ⑤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55.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에서 행정심판 제기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행정소송법」에는 제소기간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⑤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6.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판단기준에는 변경된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 ③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소 변경은 원고의 신청 없이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7. 원처분주의 또는 재결주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 ③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 ④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 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58. 소송형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 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당사자소송
- ②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항고소송
- ③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 - 민사소송
- ④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 취소소송
- ⑤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59.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 ㄷ.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

2.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경고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neg, \perp, \sqsubset$   
④  $\perp, \sqsubset, \sqsupset$                       ⑤  $\neg, \perp, \sqsubset, \sqsupset$

60.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②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③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
- ⑤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61. 취소소송상 소송요건심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원고적격의 존재여부      ② 소의 이익의 존재여부      ③ 전심절차의 준수여부  
④ 처분절차의 준수여부      ⑤ 처분성의 존재여부

62.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공개심리주의      ② 쌍방심리주의      ③ 구술심리주의  
④ 변론주의      ⑤ 직권심리주의

63.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진다.  
 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원고가 증명한다.  
 ㄷ.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에 따른다.  
 ㄹ.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6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한 적용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개시전까지만 허용된다.  
 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65.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이다.
- ② 항고소송의 판결서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③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 ④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 ⑤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66.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정판결은 중간판결에 해당한다.
- ②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 ③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
- ④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어도 가능하다.
- ⑤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67.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 ②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
- ③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등의 취소를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

68.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 ③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④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⑤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69.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 ②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 ④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⑤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70. 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    )으로 한다.

- ① ㄱ: 30일, ㄴ: 60일, ㄷ: 시효기간                      ② ㄱ: 3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
- ③ ㄱ: 60일, ㄴ: 90일, ㄷ: 시효기간                      ④ ㄱ: 60일, ㄴ: 1년, ㄷ: 불변기간
- ⑤ ㄱ: 90일, ㄴ: 1년, ㄷ: 시효기간

71.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 ②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72.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 ①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② 제28조 (사정판결)
- ③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④ 제21조 (소의 변경)
- ⑤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피압수자가 신청하였는데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와 같은 검사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제도가 준용된다.

7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 ③ 부작위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④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⑤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5.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
- ②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 ③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 ④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 ⑤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76.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 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④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
- ⑤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존재확인소송

**77.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 ②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③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78.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②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 ③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 ④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 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9.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기관소송은 권한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 ② 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기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0. A시의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A시의 공무원 甲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재심의결정’)을 하자 甲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A시의 시장은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요구받은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A시의 시장이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징계 요구 그 자체만으로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 ㄴ.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A시의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 ㄷ.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은 행정처분이다.
- ㄹ. A시의 시장이 기관소송으로서 제기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ㄱ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ㄱ